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얼마 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휴연에 자율학습 때 딱히 일주일 한 고3학년생이 담임선생님의 꾸지람이 두려운 나머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

경찰의 능중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듯하다.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김 회장에 대한 중벌 촉구는 물론 반 재벌 감정도 드높다.

재벌 회장의 비뚤어진 자녀교육

맞는 국민적 심판이 아닌가 싶다. 김 회장은 아들이 폭행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회사 직원과 폭력배까지 동원해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술집 종업원을 역시 평소 함께 나 쓰는 사람이었을 테지만, 겨워벌 엄두도 못냈다.

책임 망각한 '힘쓰는 父情'

세상이 일을 떠올리는 것은 요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가진 자의 비뚤어진 자녀교육'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김회장 스스로 '상대를 타하기 전에 자식에게 먼저 회초리를 들어 꾸짖지 못한 재 자신이 후회스럽다'고 회한의 뜻을 밝혔듯이 분명 잘못된 자녀사람이다.

실사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김승연'으로 봐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덮어버릴 수 없다. '힘쓰는' 부정(父情)이 결코 자식 사람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는 법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대기업 총수이자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을 간파한 것도 큰 잘못이다.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사람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뒷감당을 해줄 힘과 돈과 사람이 있다고 믿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또 아들의 보복폭행이라는 사적인 일로 회사 직원을 동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기업 경영의 독단을 보여준 것이다.

또 하나는 최고의 사회지도층인 대기업 총수로서 좀 더 솔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뻔한 보이는 사건에 대해 법률타의 자문만 따르며, 부인하다 경찰의 수사팀이 좁혀지자 일부만 시인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을 해야 하는 것도 그들 총수의 의무다. 솔직히 고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고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 고백만이 참 자식교육

일찍이 저명인사들의 자녀교육을 연구해온 일본의 모리시타 겐지는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최근 저서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아버지를 사칭해 유령회사를 차렸다가 자기죄로 고발당한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술과 여자에 빠져 아버지의 다비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건디의 아들 윌 처치의 아들 램돌프 등, 막되먹은 자식들로 인해 가슴앓이를 했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가르침이 섬뜩하다.

김 회장에겐 아직도 올바른 자녀교육을 할 기회와 방법이 있다. 스스로 이번 사건과 국민 앞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5월 가정의 달에 친 자식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에게 주는 값진 교육이 아니겠는가.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시설

삼성 휴대폰 해외이전 과정 주시된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의 주력 생산 기지를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해 충격이다. 첨단 국가 브랜드 기업인 삼성전자 주력사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대화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도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의 해외이전이 일자리 부족현상을 빚게 해 국내 경제활력을 빼앗긴다는 점이다. 최근 젊은층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도 기업의 해외탈출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휴대폰의 생산공장 해외이전으로 일자리 7천~8천개가 해외로 달아난다고 하지 않는가.

광주·전남도 제조업 해외이전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삼성광주전자

의 생활기전 해외이전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력 사업인 휴대폰마저 첨단 기술 유출이라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전하는 판국에 적자인 생활기전의 이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충원하지 않은 것만 봐도 해외이전설이 결코 업살만은 아니다.

몇 년 새 신규투자자 전혀 이뤄지지 않는 기아차 광주공장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미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해외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모두가 제조업 공대화 위기를 가져야 한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와 고임금, 강성 노조, 반 기업 정서 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 이탈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발전 막는 정부 규제 서둘러 완화해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지역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균형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참여정부에서도 권한의 지방이양과 규제 완화가 허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지역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선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산단 조성에 대표적이다. 규모가 작은 지방산단 조성 승인권은 시장·지사에게 있지만 승인이 나오지 않는 데 1년 이상 걸린다. 바다를 매립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

부의 환경성 검토도 거쳐야 한다. 해양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고흥군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남얼·광영 지구 개발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7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 새 개발 프로젝트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규모가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지역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지방의 규제장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 기업의 투자 없이는 지역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 유치를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의 이양과 함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상하



사회법에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공익이사가 뜨거워 감자다. 왜 공익이사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찬반의 입장과 차이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결론을 두고 힘겨투기로 치닫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가 사회환경 변화와 입법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이사제도는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왜 그렇게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구성하는데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형식적인 법의 해석논리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출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학도의 부실경영이나 비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익이사의 존재는 객관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외부인사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내부 정보 유출방지과 경영유지보다 우선한

공익이사 논쟁, 부끄러운 자화상

다. 또한 가난과 질병속에서 사회복지 실천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법인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경과 노고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정서적인 이념과 법의 경계는 구분되어야 하고 법의 형식과 내용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을 사회적 재원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사회적 재원이 될 것이라는 법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듯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 재산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가치를 부여한다면 공익이사는 이것으로 이유는 충분하다. 공익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면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원활한 조직운영이 힘들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백한 변명을 불과하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을 위해 공익이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지만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테두리에서는 사회적 재원으로 해석하려 하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젠 글로 냉정한 명확성이 투병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공익이사는 상징적이며 최소한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의 논리를 따지기 앞서 성숙한 민주사민의 가치로서 인식해야 할 사안이다. <나주대 교수·2007년 1월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잘라버린 신용카드도 붙이면 사용 가능... 꼭 해지 신청을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을 자주 본다. 만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므로 나중에 발송돼 오면 그때 폐기처분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전국 직장인들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한두개일까.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이것을 보통 가위로 잘라 무심코 휴지통에 버리고 있다.

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마그네틱도 물리적 충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고 해도 개인 정보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다시 붙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마그네틱 부분만 구부러져 아무데나 버리기보다 반드시 해당 카드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사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우향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기고

광민



국제결혼이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여덟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었으며, 전남의 경우는 농촌 총각의 네 명 가운데 한명은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해 보자. 광주·전남의 농가 중 30대 2명 가운데 1명은 미혼이다. 이대로 가면 20년 남게 외국인 신부를 데려와야 할 형편이다. 그들이 우리의 농촌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들이 농촌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혼혈 자녀는 앞으로 3년 후면 10만 명에 이르러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의 4분의 1은 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한다. 엄연한 한국인이 이들이 말쑥·피부색·문화·인종의 차이로 인해 놀림을 받으면서 차별 속에서 성장한다면 우리사회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제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다. 최근 감금식 인권대사가 국제결혼을 통해 동남아시아가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성격의 스캐일까지 받아들여 한국

다문화·다민족 시대에 대비 하려면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온 신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낳은 혼혈 아이들이 우리 농촌을 지켜 갈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 국제결혼은 '별법'이다. 아니다. 혹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하기는 이제 너무 진부하다. 이 시점에서 다뤄야 할것은 매매혼 문제다. 돈을 주고 여성을 사는 매매혼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이주여성들의 대해 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이를 약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을 가려낼 줄 아는 현명한 여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대적 숙제로 요구된다.

의 위상이 갈절로 커지고 견고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결혼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우리농촌을 살리며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많은 농촌에 적응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 나지 않은 길을 가거나 어느 누구에게나 낯선 일이고 두렵기까지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인이 하나 되어 소중한 가정 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때이다. 한 나라의 국력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건강한 사회란 아이는 보호받고 청년은 인정받고 노인은 공경 받는 3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시 주지연합회장 >우각사 주지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소방시설 갖춰질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일정규모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목욕장, 게임방, PC방, 산후 조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전 이러한 다중업소인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 서울 고시텔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업소는 물론 기존 업소도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규모 법령이 지난 2004년 5월 제정됐다. 소규모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과 충분한 홍보를 위해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제 다중이용업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완벽해야 하는 기간이 임박했다. 즉 오는 5월 29일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이후부터 소방·방화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오는 5월29일에 임박해 공사하기 보다 미리 영업일정과 공사 일정을 고려해 성실하게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임박해 공사하면 비상구와 비상구도 비상구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완비기간까지는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소속하 시설을 완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내 재산은 물론 귀한 생명이 지켜주는 생명시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상민·순천시상서 서면파출소

無等鼓 Golfer and Yeou article with images and text.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